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40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4.

발 의 자 : 성일종 · 김영식 · 홍문표
김태흠 · 이태규 · 권영세
신원식 · 이명수 · 양금희
조수진 · 태영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,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,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,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,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관광특구가 다수 있으며,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.

이에,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,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

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70조 및 제74조의2 신설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”을 “30퍼센트를”로 한다.

1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(서울특별시는 50만 명, 시·구는 3만 명, 군은 2만 명) 이상일 것

제73조제2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2(관광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·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

2. 「주택법」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
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
4. 그 밖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0조(관광특구의 지정) ① 관광 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한다.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·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	제70조(관광특구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</u>	1.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(서울특별시는 50만 명, 시·구는 3만 명, 군은 2</u>

<p>2. (생략)</p> <p>3.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3조(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·면적조정·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만 명) 이상일 것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30퍼</u> <u>센트를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3조(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3조의2(관광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·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</u></p>
--	---

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
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
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
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
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다음
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
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
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
2. 「주택법」 제63조에 따른
투기과열지구의 지정
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
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
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
의 지정
4. 그 밖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
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